

##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

金尚憲((株) 豊山 사장)

1970년대초 태동된 국내 방위산업은 그동안 높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다른 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높은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방산업체가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산 물자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장기물량 통보의 가변성과 원가계산상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산화개발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수출통제정책과 지적 소유권을 둘러싼 로얄티 지급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는 생산과 軍의 전력증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고도정밀화 추세에 있으나 기존 재래식 무기의 생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金裕採(상공부 기계공업국장)

방위산업은 국내 기계공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1988년 기계류 80억불, 자동차 60만대 수출을 기록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방위산업은 기본 재래식 병기개발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나, 전자·통신·유도·항공병기는 개발초기 단계로서 하루속히 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하여 자체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자공업의 경우 民需분야는 개발능력이 성숙단계에 있으나, 防産분야는 수요의 제약으로 인해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90년대

韓國國防研究院(KIDA)이 주최하고 韓國防衛産業振興會(KDIA)가 후원한 「방위산업 정책토론회」가 4월 27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1970년대 초반 태동된 방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제1토론: 방위산업의 평가, 역할 및 전망, 제2토론: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방안, 제3토론: 군사기술이전과 국제방산협력, 제4토론: 방위산업 육성정책등의 주제에 관해—각계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좌담회 글은 Panel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 및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방위산업 육성정책은 전자·유도 및 항공 공업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関晟基(ADD 책임연구원)

업체 연구개발과제는 지난 '70년대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985년 연구개발과제를 정부주도와 업체주도로 구분·운영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업체와의 연구개발 계약방식에서 제반 비용을 고정시키게 되고, 업체의 Engineering Fee와 같은 간접투자비의 반영은 곤란하게 만든 것에 주된 원인을 찾을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내에 설치된 연구소에 연구개발 위탁계약시 연구의 지속성을 유지시키지 못함으로써, 방산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현재의 수준보다 높여 확대투자를 해야 합니다.

둘째, 불확실성을 내재한 연구개발계약은 Incentive 계약방식이나 다른 보상계약을 적용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종합적인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소요軍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의

개발가능성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의뢰하기 보다는 초기단계부터 업체에 공개하여,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대학내에 특정연구소를 2~3개 설치하고 이를 시험 운영하여 국방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습니까.

#### 金在洙(삼성항공 우주연구소장)

일본의 경우 방위산업정책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항공공업은 1953년 미국이 F-86 항공기 정비의뢰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끝에 항공기 면허생산에 참여함으로써 현재 세계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국내 방산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선진기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官·學·産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둘째, 비밀에 얽매어 있는 방산정보자료의 보안관계를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원활한 정보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의 경우 공군 기술공과 대학원이 설치되고, 軍·官·民 모두에게 교육이 개방되어 방산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국방대학원 교육과정에 이공계통을 신설하여 많은 국방연구전문가를 양성·배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柳俊馨(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현재의 방산업체 연구개발 수준은 미약한 단계이고, 기술정보의 부족으로 정부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이나 비밀을 너무 강조하여 정부의 방산계획이나 방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이루며, 나아가서는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비밀이나 보안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업체에 과학기술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방산관계자 협력회의나 각종 토의회에 참여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沈利澤(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장)**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수준은 제작기술에 국한되어 그 수명이 짧고, 응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사업에 연결되어 활용되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술고도화를 위해서는 요소기술획득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방위산업 목표설정과 소요를 공개하여 업체가 목표지향적으로 확신을 갖고 경영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외국의 기술획득에는 off-set과 면허생산, 공동개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동개발은 역점을 두고 추구해야 할 분야로서, 국내에 이를 제의하는 외국 업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이제 그 분위기는 성숙단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학·연이 각기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를 관리·유지하는 제도확립과 대형과제를 통해 보유기술을 집약화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업체는 risk-taking하는 의지와 제도를 확립하며, 제3국으로의 수출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宋 梓(연세대 경영학 교수)**

균형있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업체에서는 능률적인 생산과 시장확보를 위한 자체노력에 전력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방산물자 생산에 투하된 자본의 표준이익이 산출될수 있도록 표준원가계산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노사분규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파업사태까지 가는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申廷植(한양대 경영학교수)**

방산물자 계약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방

산물자는 업종별, 물자별로 세분한 원가계산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체에 정당한 이윤을 주어야 하며, 현재의 원가계산산정부서의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하여 조달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池昌昊(국방부 방산국장)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내에 시행할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내에 방산관계자료를 수집하고 정리업무를 취급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센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둘째, 업체주도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체제를 구축하며, 연구비 과다와 비밀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셋째, 방산업체의 가동율과 수익율을 제고하며, 모방개발을 탈피하고 독자적인 개발로 해외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수출제도책 발전방안으로 국내업체에 방산물자 수입을 요청하는 일부 개발도상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에 FMS제도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넷째, 핵심기술 확보위주의 절충교역 추진문제는 핵심기술과 필수기술을 동시에

획득할수 있도록 현재의 50% 절충교역 유지를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제도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방산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계 지원책으로서 현재 조성된 방산육성기금은 일시에 많은 증액이 어려우므로, 매년 일정금액을 추가 조성하여 보다 많은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방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는 軍 전력증강 및 교육훈련에 막대한 차질을 줌으로써,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업체 자체에서 해결되도록 유도하며, 미해결시에는 병역특례자 조치 및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

이번 4월27일의 방위산업 정책토론회는 「자주 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주제아래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분과는 2명의 연사가 현황과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발표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본誌에서는 제작여건상 8편 모두를 게재하지 못하고 5편만을 선별, 발췌하여 실게 되었다. 본誌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와 역할 / 郭 相 瓊 (참조 p.p 12~15)
- 국방 연구개발의 활성화 정책 / 閔 晟 基 (참조 p.p 16~25)
-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전망 / 柳 俊 馨 (참조 p.p 26~35)
- 선진국 군사기술이전 정책과 기술획득 / 金 勳 燮 (참조 p.p 36~45)
- 방위산업 再跳躍을 위한 提言 / 李 景 勳 (참조 p.p 46~49)